군위군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 입점

성과 이전부터 가능성에 주목한 협력…도농 함께 상생 모델 확장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3일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과 「군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심 유통공간으로 로컬푸드 판로를 확대하는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이미 성과가 입증된 이후의 입점이 아니라, 군위 로컬푸드 직매장 성공 사례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전자관이 먼저 협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자관은 로컬푸드의 공공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군위군에 입점을 제안했으며,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거쳐 직매장 조성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전자관에는 약 30평 규모의 군위 로컬푸드 직매장이 새롭게 들어서며, 군위군은 지역 농가가 생산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출하 농가 관리와 품질·위생 기준을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관은 매장 공간 제공과 함께 직매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협약 체결 후 최초 1년 간 매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직매장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생 의지를 담았다. 이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로컬푸드 직매장의 안정적 정착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전자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향후 지하철 1호선 대구역사 내 시민 유동이 많은 공간에 조성될 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개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군위군은 지역 농산물을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도농상생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김진열 군수는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저출생 극복성금 인공지능 돌봄지원 로봇 보급

경북도는 내년부터 저출생 극복 성금 10억원을 투입해 아동 돌봄 시설 10개소에 안전, 교육, 보건 3대 분야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 100여 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인 가운데, 23일 도청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을 전시했다.

이날 행사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저출생 극복 성금(10억 원) 전달,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 전시, 시군 및 돌봄 센터 관계자들의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전시된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은 안전, 보건, 교육 3분야 7종으로 방범·순찰 로봇, 방역·살균 로봇, 위험 행동 감지·경고 로봇, 소근육 발달 및 운동기능 강화 지원 로봇, 놀이·교육 지원 로봇, 의사소통 지원 로봇, 그룹형 교육 로봇 등이다.

도청에서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 7종(안전, 보건, 교육분야)' 전시

방범·순찰 등 안전 지원 로봇은 화재, 가스 누출 등 이상 상황 감지 시 화재 초동 대응 기능이 작동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순찰을 통해 돌봄 센터 외부에서의 사고, 외부인 침입 등 위험 요인이 일어나면 즉각 알리는 기능을 한다.

방역·살균 등 보건 지원 로봇은 공기 살균·정화, 바닥 방역 등을 주 기능으로 원격 조종 및 인공지능(AI) 자율주행을 통해 아동의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주야간으로 상시 로봇이 가동돼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놀이 및 의사소통 지원 등 교육 지원 로봇은 챗지피티(ChatGPT)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을 탑재해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로봇으로, 음성 학습 코칭, 스토리텔링, 인지 게임 등 다양한 교육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발음 및 단어 인식 기술을 통해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돕는다. 또한, 아이들의 얼굴을 인식해 맥박, 호흡 등 생체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로봇과 연동된 블록 놀이를 통해 소근육 발달과 인지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로봇 시범 보급과 함께 돌봄 종사자 인공지능(AI) 교육,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후관리 등도 함께 서비스해 보급 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이 모아준 소중한 성금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성주군『초유은행』농가 만족도 100%

농업기술센터 초유, 먹여 본 농장주는 안다!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관내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통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초유은행』을 금년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전농가에서 만족도가 매우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초유은행』 운영 1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초유 활용에 따른 한우농가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초유은행』 이용 축산농가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 농가의 98%가 초유 공급이 송아지 면역력 개선에 효과를 봤다고 답했으며, 설사병과 폐사율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농가도 각각 88%에 달했다.

또한 『초유은행』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 80%, '만족' 20%로 응답해 전체 농가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초유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는 충분하게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송아지 폐사율은 초유은행의 초유를 사용하기 전보다 7.4%로 1.3% 감소하였으며 초유은행을 통한 안정적인 초유 공급을 통해 질병 예방과 폐사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 분석된다.

용암면의 한우농가는 "시판 초유보다 사용 방법이 어렵긴 하나 효과는 더욱 좋다고 느낀다" 말했다. 『초유은행』은 2025년 성주군의 중점추진사업으로 젖소 농가의 잉여초유를 활용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온살균, 면역성분검사, 급속냉동 등 위생적인 관리를 거쳐 한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경영비 절감 및 송아지 출생 직후 필수적인 면역 형성을 돕고 폐렴, 설사병등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초유의 중요성과 초유를 통한 송아지 질병관리 예방에 대한 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사)한국낙농육우협회성주군지부, (사)전국한우협회성주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품질 초유 생산, 분석·공급 관리, 젖소농가 지원까지 3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윤석 기자

생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시행

사망 이후 장례까지 65세 이상 가구 100만 원…연령·가구별 차등 지원

의령군은 2026년부터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군민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420여 명의 군민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복지제도가 주로 생존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공백으로 남아 있던 사망 이후 장례 부담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군민 전 가구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원한다.

65세 미만 군민의 경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록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에는 100만 원을, 그 외 일반가구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류·선불카드·모바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정책발행을 통해 사용처를 확대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로 사용이 제한되던 의령군 농·축협 하나로마트(본점 포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장례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장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남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의령군은 군민의 삶의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2025년 진로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콘서트에는 2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의령 출신 선배들이 연사로 참여해 자신의 진로 선택 과정과 직업 세계의 현실, 시행착오와 극복 경험 등을 공유하며 청소년들과 소통했다.

최성룡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노인 인권 보호 협약 체결했다!

공공 법률지원 강화로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권리 보호 확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장혜원)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유규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과 함께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인권보호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체계적인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권리 보호를 통한 안전한 노인 보호 환경 조성, ▲현장 종사자 권리 보호, ▲기관 간 협력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사회서비스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피해 사례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며,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여 피해 노인의 권리 회복과 보호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와 상담원 등 현장 종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명예훼손,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문제도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률과 복지 현장이 함께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피해 노인과 현장 종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어르신과 현장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공공 법률지원 모델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우 기자

구도심 새 집 갖기 재개발 사업에 시동!

울산시가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에 '새 집 갖기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울산시는 '구도심 새 집 갖기 재개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번 관리계획 승인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와 북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쾌적하고 활력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염포동 중리마을은 1970년대에 조성된 집단취락 형태의 마을로서 전체 건축물 중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84%로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로 꼽힌다.

지난 2019년 9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지정됐으나, 중리마을은 고령화 지역 특성상 자력 주택개량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어 왔다.

이에 울산시는 주민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식의 주택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해 중리마을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최대 150억 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이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공공 주도로 사업이 추진돼 일반 재개발사업 대비 사업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시장은 "중리마을과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주민과 공공이 협업해 신속하게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쾌적하고 활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와 북구는 내년 상반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국비 공모를 신청해, 2027년부터 염포동 중리마을 새 집 갖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호근 기자

민방위 경보시설 170개소 구축 가청률 81.5% 달성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민방위 경보시설 7곳을 추가하며, 총 170곳을 구축해 도내 경보 가청률 81.5%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민방위 경보는 적의 공격 또는 중대한 재난 등이 발생 시, 사이렌과 음성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 수단이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주로 인구가 밀집했거나 상습 재난 피해 지역 또는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한다.

내년에는 창원시와 의령군 등 5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에는 사이렌 장비를 활용하여 주말·공휴일에 총 16회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방송과, 기상 특보에 따른 긴급 재난 예방 홍보 방송을 송출했다.

현재는 산불 조심 기간('25.10.20. ~ '26.5.15.)을 맞아 주말·공휴일마다 114곳의 민방위 경보시설(사이렌 장비)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시 사이렌 장비를 통해 상황 전파를 함과 동시에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 상영관) 전관방송, 라디오(KBS, MBC) 방송, 재난 예·경보 장비, 교통안내·재난 전광판 등을 통해 경보 상황을 전파한다.

윤현길 도 안전정책과장은 "민방위 경보시설은 재난 발생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민방위 경보 사각 지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및 회수관리사업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시군별 집행현황 및 추진계획 발표 △집행 부진 요인 파악 △반납장소 운영현황 점검 △어업인 참여 확대 방안 등이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도 의논했다.

최성룡 기자